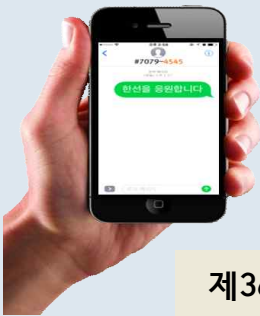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발제자]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
[일 시]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69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이후(After Corona)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구조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이했다. 코로나는 소멸하지 않고 함께 하는 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주기적인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필요할 것이다. 지속적인 방역과 보건정책도 필수적이다.

- 향후 복지정책은 탈코로나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개방경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고의 복지정책은 빈곤 박멸이다. 현금중심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국가 부채를 증가 시켜 국가 파산 가능성을 높인다. 바우처를 통한 질적 복지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현금중심의 복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정복지'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 탈코로나를 위한 복지정책

- ◆ 최고의 복지정책은 빈곤 박멸이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복지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탈코로나 복지정책으로 가는 가장 최선의 전략은 혁신적인 개방경제 환경 조성이다. 그러려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정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며, 사회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다. 탈코로나 복지정책은 세금낭비도 방지할 수 있는 사회발전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 보건의료정책은 집단면역의 유지와 의료자원의 효율화가 중요하다. 건강보험에서 치료중심의 과잉보장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산업의 규제완화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재구축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화는 물론 의료비 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의료비의 과잉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 코로나와 경제

- ◆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최근 경제는 포지티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현장은 거의 파괴된 수준이다. 정부 발표의 수치와 현실이 매우 다르다. 비정규직, 청년·여성 실업이 심화되고 있고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감소가 서비스업과 자영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경제의 가장 심각한 영향은 '부채공화국화'이다. 가계와 기업의 빚은 2020년 기준 4,136조 원이고 국가부채는 1,985조 원이다.
- ◆ 코로나로 인한 경제부진에 더하여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친노동정책,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이 일자리를 축소시켰다. 최근의 고용 증가는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문제는 3·40대의 상용 근로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허리 계층인 3·40대의 몰락은 가정파탄 현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 ◆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불균형 회복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21년 경제전망을 보면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1.6%에서 5.1%로, 개발도상국은

4.6%에서 6.7%인데 한국은 겨우 3.6%로 예상된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수준의 경제로 돌아가는 시기는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과 창조적 파괴에 달려있다.

- ◆ 코로나가 끝나면 K-거품이 문제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세계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이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산업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이 높다고 믿어왔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의료산업 경쟁력의 한계를 보았다. 방역은 의료산업이 아닌데도 정부는 방역이 의료산업인 것처럼 ‘방역이 최고의 백신’이라며 광고하고 있다.

◆ 코로나 Divide

- ◆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현상은 양극화이다. 국내의 양극화(Internal Divide)와 세계적 양극화(International Divide)가 동시에 발생하는(Dual Divides) 현상이다. 과거의 양극화와 달리 최근의 양극화는 완전히 분절된 양극단의 중간 고리가 끊어진 상태이다. 국내만 보더라도 고용시장, 소득, 소비뿐만 아니라 교육 양극화도 심각하다. 국제적으로는 백신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현저한 국가 경쟁력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 기업은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 대면기업과 비대면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개인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중고령층과 청년층 등으로 양극화되었고 자산의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 ◆ 양극화를 기본소득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습관적 실업급여, 성과급 갈등, 역진적 복지정책, 기회상실로 인한 낙오자(Left behind)를 양산하는 소득재분배의 악습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소득재분배의 악습을 끊기 위해 낙후된 기업과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조정, 교육훈련,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새로운 소득 재분배 정책이 되어야 한다.
- ◆ 경제적 양극화 뿐만 아니라 교육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IT 기자재 활용도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교육 공백이 심각해졌다. 사범대학 중심의 공교육의 폐쇄성을 개방성으로 변경해야 하고 창의력을 높이는 기초과목 확충이 필요하다.

◆ 코로나 복지정책의 방향

- ◆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공정복지의 정책이념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복지는 부자들의 소득을 가능하면 낮추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정복지가 아니다.

가. 기본소득

- ◆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뜻한다. 기초생활제도, 기초연금, 육아수당, 청년수당 등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진적 소득재분배 제도이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의 ‘기본’시리즈는 실질적으로 공짜가 아니다.
- ◆ 기본소득제는 바우처 제도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금지급에서 질적 서비스(voucher)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분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가 필수복지를 제공하고 각 개인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는 민간 부분이 공급하는 정부와 민간의 복지 콤비네이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경쟁을 하면 복지서비스 공급 매커니즘의 다양화와 복지의 질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나. 새로운 복지 시스템 구축과 규제 개혁

- ◆ 복지재정은 세대내 부과 방식의 예산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복지 재원조달을 위한 세제개혁도 필요하다. 파산 중인 생애보장사회보험의 개혁 또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체계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 ◆ 노동시장은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효율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높여 나가야 한다. 52시간제의 신축적 운영,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등 보다 유연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 주거안정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전세제도가 있는 한 깎투자자는 피할 수 없다. 선택의 문제이고 모기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거복지는 주거능력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계층에 국한해서 공공부분이 맡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노인주거환경 제도의 도입도 중요한 문제이다.

다. 코로나 대책

- ◆ 코로나 대책으로 재난지원금과 피해자 보상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운영은 기술교육, 민간부문 취업알선 등 탈코로나 경제 운용방안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양업계의 폐업 및 전업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관련 제도에 정부 예산이 끝없이 들어가게 된다. 향후 코로나 이슈들은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미래를 위해 보상금 제도의 프로세스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